

# 농업인들,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낮다

### 경제 활성화 '못함' 40.1%, 농업정책 '불만' 39% 가장 필요한 정책은 '소득보장·최소 생산비 보장' 서삼석 "농식품부가 현장 목소리 반영 못한 결과"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과 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농업인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의 제시된 주제 중 '공익형 직적직불제 확대 및 개관'에 대한 평가(3.05) 제외하고 전부 중간 점수(3점) 이하를 기록했다. (5점 만점 기준)

특히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못함'과 '못함'이 40.1%에 달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은 '매우 못함'과 '못함' 역시 36.2%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 역시 박했다. 전체적으로 '매우 불만'과 '불만'이 39%에 달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13.2%였다. 농민들은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농정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 유관기관의 '중요도'와 '노력 정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농민들은 협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를 각각 4.24와 4.13으로



중요하게 여겼지만, 실제 노력 정도에 대해 협동조합은 3.91, 농림축산식품부는 2.94의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거환경만 3.22를 기록하고, 교육여건, 교통여건, 보건여건, 여가, 소득 및 일자리 등은 전반적으로 2.55에서 2.62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시 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과 '직업만족도' 역시 각각 평균 2.10과 2.94로 중간 점수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인 직업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소득(59.1%)'과 '정부관심 및 지원 부족(1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민들은 10년 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낮게 평가했다. 비관적 전망이 44.8%에 달했으며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역시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70.6%까지 치솟았다.

서삼석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은 전체적으로 높은 중요도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 등 부처에서 농민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농업인들이 중요하게 꼽는 정책인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추진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농민 조합원 1천5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0% 포인트다. /김진수기자

## 교육투자 예산 광주 49억, 전남 162억원 줄어 윤영덕 "지자체 인재육성 정책 헛 구호" 지적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6천86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9년 605억원에서 2020년 557억원으로 49억(8.0%) 감소했고, 전남은 1천463억원에서 1천301억원으로 162억(11.1%)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비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만2천원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같은 기간 58만원에서 46만원으로 -12만원, 전남은 75만1천원에서 68만8천원으로 -6만3천원 각각 감소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 이낙연, '대장동 공세' 수위 놓고 진퇴양난

### 공격하자니 '원팀 저해' 비판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선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두고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다.

이 전 대표는 경선이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지사를 향해 대장동 수사를 고리로 한 '불안한 후보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지역 공약 발표 회견에서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에선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꼽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 지사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뇌물은 개인 차원일 수 있지만 배임은 그렇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유의해 보고 있다"며 "당시 사업에 대해 성남시장이 보고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공세의 적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지만, 캠프는 일단은 그간의 대응 수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되, 도덕성 비교우위로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는 기존의 수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파상공세에 나설 경우 당장에 원팀 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를 해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마냥 공격하기도 어려운 처지기 때문이다.

캠프 관계자는 "공세 수위를 높인다고 경선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역풍만 당할 수 있다"며 "본선에서 이길 후보,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이후 스탠스를 두고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경선이 종료되면 이 전 대표가 당장 결

과 승복 연설에서 '원팀 선언'을 하고 이 지사를 흔쾌히 지지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지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복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 순간 훗날 이 지사의 책임이 수사에서 드러났을 경우 이 전 대표가 공동 책임 프레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캠프 내부에선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어느정도 날 때까지는 당 선

대위 출범을 미루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열어놓고 경선 이후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대장동 수사에서 이 지사의 책임 소지가 드러날 경우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는 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당내 계사판연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지사에 대한 후보직 사퇴 요구와 더불어 경선 중단 주장까지도 올라오고 있다. /연휴뉴스

## 신정훈 "수도권 전기 송전 비용 지방에 전가"

수도권의 낮은 전력 자급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전력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5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 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데 한 해에 2천300억원 꼴이 소요된 것



이다. 신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투자환경, 정주여건을 개선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특정지역에만 전력시설을 집중시키고 수도권, 대도시가 그 수혜를 누리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방으로 전가되는 만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소병철, 아동학대사범 느는 데 기소율 '절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천601건에서 2020년 8천625건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만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사건 중 실제 기소된 사건 비율은 2016년 26%에서 2020년 13%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다.



소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 자체가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아동학대 신고사건 중에서도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적은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아동학대 재범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